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7차 정책토론회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연계협력 방안

2022. 11. 30.(수) 15:00~17:00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연계협력 방안

일시 2022. 11. 30(수) 15:00~17:00

장소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사회: 김아름 박사(육아정책연구소)

토론회 일정		
14:30 ~ 15:00	등록	시도청 보육담당공무원
15:00 ~ 15:05	환영사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15:05 ~ 15:15	주제발표 1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연계협력 실태 및 강화 방안 문무경 실장 (육아정책연구소)
15:15 ~ 15:25	주제발표 2	유보통합 대비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김 용 교수(한국교원대)
15:25 ~ 15:55	17개 시도별 토의	각 지자체와 교육청 토의
15:55 ~ 16:00	휴 식	
16:00 ~ 16:50	전체 토의	임성필 사무관(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김수현 사무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16:50 ~ 16:55	마무리 및 폐회	

CONTENTS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연계협력 방안

목차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연계협력 실태 및 강화 방안 1

┆ 문무경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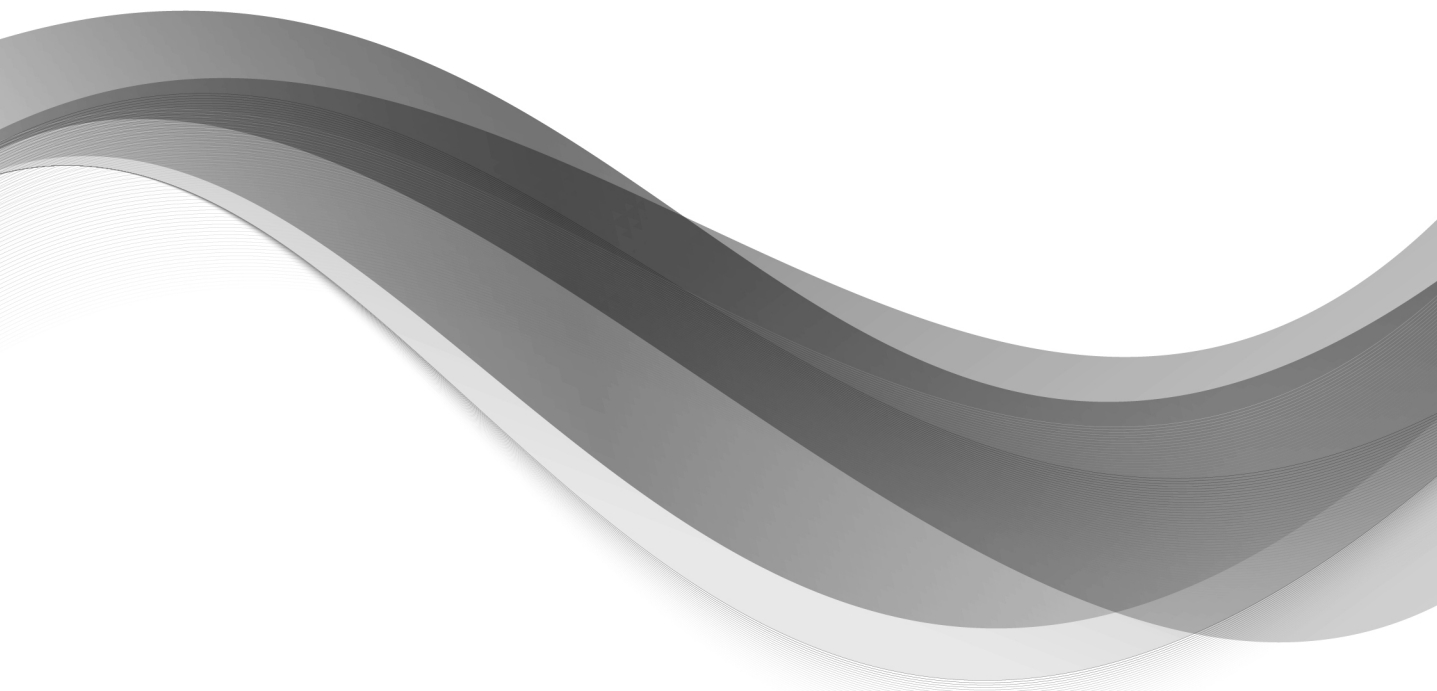
유보통합 대비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13

┆ 김 용 교수 (한국교원대)

**주제
발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연계협력 실태 및 강화 방안

문무경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연계협력 실태 및 강화 방안¹⁾

문무경 박사 | 육아정책연구소

1.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연계협력 관련 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동법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 협의회를 두고, 이러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17개 각 시·도는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담당 국장, 도시계획국장,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조).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제6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시·도의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제11조 제6항), 시·도교육위원회는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제11조 제7항),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1조 제8항).
- 또한 새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같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문무경, 김아름, 김용, 김영민(2022),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도 기본과제를 토대로 작성됨.

2.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보육·유아교육 부서 및 인력 현황

□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부서 및 인력 현황을 종합하면 <표 1>과 같음.

-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 업무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수, 각 기관의 영유아 수 차이를 고려할 때 시도청, 시도교육청의 업무 대비 인력 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부서 및 인력 현황은 향후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 향후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보육·유아교육 통합부서의 인력 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필요함.

<표 1>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보육·유아교육담당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과	팀	현원	조직 구성
서울	시청	영유아담당관	영유아정책팀, 영유아지원팀, 영유아기반팀, 보육사업팀, 특화보육팀, 보육관리팀	32	담당관1, 팀장6, 실무사무관1, 주무관24
	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정·인사, 유아생활교육, 유아교육지원	24	과장1, 장학관2, 장학사10, 사무관1, 주무관10
부산	시청	출산보육과	보육행정팀, 보육평가팀, 보육지원팀	15	과장1, 팀장3, 주무관10, 기타1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7	과장1, 장학관1, 장학사3, 주무관2
대구	시청	출산보육과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10	과장1, 팀장2, 주무관7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유아교육담당, 유특학사지원담당	14	과장1, 장학관2, 장학사4, 사무관1, 주무관5
인천	시청	영유아정책과	영유아정책팀, 보육지원담당, 보육기반담당	17	과장1, 팀장3, 주무관13
	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8	과장1, 장학관1, 장학사3, 주무관3
광주	시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보육관리팀	10	과장1, 팀장2, 주무관7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유아교육, 유아·특수운영	14	과장1, 장학관1, 장학사5, 사무관1, 주무관5, 행정실무사1
대전	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보육관리팀	10	과장1, 팀장2, 주무관7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7	과장1, 장학관1, 장학사3, 주무관2
울산	시청	복지인구정책과	보육담당	6	과장1, 팀장1, 주무관4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정팀, 유아특수행정팀	16	과장1, 장학관1, 장학사5, 사무관1, 주무관6
세종	시청	여성가족과	보육기획담당, 보육지원담당	11	과장1, 팀장2, 주무관8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정	6	과장1, 장학관1, 장학사3, 주무관1
경기	시청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보육컨설팅팀, 보육품질관리팀	25	과장1, 팀장5, 보육정책전문관1, 주무관19
	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기획담당, 유아교육혁신담당, 유아교육행정담당, 사립회계운영지원담당	23	과장1, 장학관3, 장학사7, 사무관2, 주무관10
강원	시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5	과장1, 팀장1, 주무관3
	교육청	교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	6	과장1, 장학관1, 장학사3, 주무관1
충북	시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5	과장1, 팀장1, 주무관3
	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	유아교육	7	과장1, 장학관1, 장학사3, 주무관2

구분		과	팀	현원	조직 구성
충남	시청	출산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6	과장1, 팀장1, 주무관4
	교육청	교육과정과	유아교육	10	과장1, 장학관1, 장학사3, 주무관5
전북	시청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6	과장1, 팀장1, 주무관4
	교육청	학교교육과	유아교육과정	7	과장1, 장학관1, 장학사2, 주무관3
전남	시청	여성가족정책관	보육지원팀	5	정책관2, 팀장1, 주무관2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유초등인사팀	11	과장1, 장학관3, 장학사4, 주무관3
경북	시청	아이세상지원과	보육업무팀	6	과장1, 팀장1, 주무관4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11	과장1, 장학관1, 장학사4, 주무관4, 기타1
경남	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	7	과장1, 팀장1, 주무관5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유치원장학, 유치원지원	17	과장1, 장학관1, 장학사6, 사무관1, 주무관8
제주	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4	과장1, 팀장1, 주무관2
	교육청	학교교육과	유아교육담당	6	과장1, 장학관1, 장학사2, 주무관2

주: 1) 시도청 내용은 <표 VI-2-1>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교육청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조직 인력 현황 내부자료를 활용함. 파견/순회교사 수는 제외함.

□ 중앙부처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조직과 인력 현황2)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부서는 총 36명(국장 1, 과장 3, 서기관 3, 사무관 12, 주무관 13, 기타(민간 전문가) 4)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반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인력은 총 22명(과장 1, 사무관 7, 연구사와 주무관)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지원 행정인력의 약 60% 수준임.

〈표 2〉 중앙부처의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행정조직과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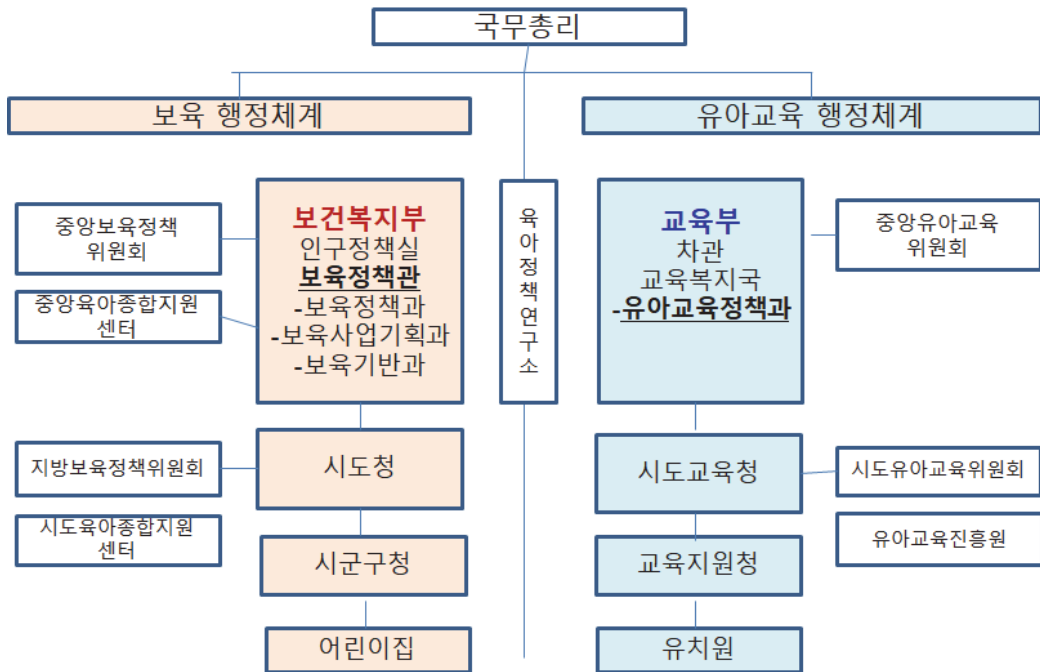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직제			총인원 (명)	계	과장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기타
	직제	국명	과명							
보건복지부 (보육)	1국 3과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36 (국장 1 포함)	13	1	2	4	4	2
			보육사업기획과		11	1	1	4	5	-
			보육기반과		11	1	-	4	4	2
교육부 (유아교육)	1과	교육복지국	유아교육정책과	22	22	과장 1, 사무관, 연구사, 주무관으로 구성				

자료: 연구진 작성.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sg/ssg0101mn.jsp?PAR_MENU_ID=05&MENU_ID=050201;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user/detailRenew.do?deptCD=1342199&m=0604\(2022. 6. 24. 인출\)](https://www.moe.go.kr/user/detailRenew.do?deptCD=1342199&m=0604(2022. 6. 24. 인출))

2) 최은영 외(2022)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p.53 (거버넌스, 문무경 작성),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

□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체계



3.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보육·유아교육 관련 연계협력 업무³⁾

- 응답자 전체의 56.7%가 시도청/시군구청과 예산 지원, 행사 개최, 상호 시설 이용, 지원자료 공유 등의 업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본청(51.8%)보다 교육지원청(59.0%)이, 교육청(51.9%)보다 도교육청(60.6%)이 업무 협력에 적극적임.
 - 권역별로, 전라권이 73.9%로 가장 연계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이 49.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3〉 시도청/시군구청과 업무 협력 여부

단위: %(명)

구분	협력함	협력하지 않음	(수)
전체	56.7	43.3	100.0 (178)
시/도			
시	51.9	48.1	100.0 (79)
도	60.6	39.4	100.0 (99)
$\chi^2(df)$	1.36(1)		

3)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 총 178명 참여(본청 56명, 교육지원청 122명).

구분	협력함	협력하지 않음	(수)
권역			
수도권	49.3	50.7	100.0 (75)
충청권	57.1	42.9	100.0 (28)
전라권	73.9	26.1	100.0 (23)
경북권	66.7	33.3	100.0 (18)
경남권	57.7	42.3	100.0 (26)
강원/제주	50.0	50.0	100.0 (8)
$\chi^2(df)$	5.32(5)		
기관 유형			
본청	51.8	48.2	100.0 (56)
교육지원청	59.0	41.0	100.0 (122)
$\chi^2(df)$	0.82(1)		
직군			
전문직	57.0	43.0	100.0 (135)
행정직	55.8	44.2	100.0 (43)
$\chi^2(df)$	0.02(1)		
경력			
1년 미만	47.2	52.8	100.0 (36)
1~3년 미만	62.3	37.7	100.0 (53)
3~5년 미만	40.8	59.2	100.0 (49)
5~10년 미만	84.6	15.4	100.0 (26)
10년 이상	64.3	35.7	100.0 (14)
$\chi^2(df)$	15.61(4)**		

** $p < .01$

□ 실제 수행하는 업무 협력 사례

- 시도교육청(본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유아교육비, 급식비, 돌봄 예산 등 비용 지원 협력.
- 교육지원청은 본청보다 지자체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안전관리, 돌봄 사업 외에 교육 사업, 시설 지원, 유치원 관련 지원, 공동 행사 개최 등의 업무 협력

〈표 4〉 시도청/시군구청과 업무 협력 내용

기관 유형	업무 협력 내용	
본청	비용 지원	• 무상급식비 지원 • 유아학비(무상교육) 지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 -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 돌봄예산 지원 • 유치원 꿈을 담은 교실 사업 예산 지원
	비용 지원 외	• 유치원 꿈을 담은 교실 사업, 유치원 공간 혁신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 유아교육 및 보육협의체 구성

기관 유형	업무 협력 내용	
		• 어린이집 교원 행사 교육감 참석 • 안전관리 업무(아동학대) • 학부모안심유치원 • 시 협력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유아교육진흥원 체험 어린이집 일부 개방 •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지원청	비용 지원	• 유치원 간식비 지원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 유아학비(무상교육) 지원 - 만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교육경비 지원 - 외국국적유아학비 - 유아교육 교부금 지원 • 사립유치원 인건비(교원 처우개선비, 기본급보조금 등) 지원
	비용 지원 외	• 안전관리 업무 - 관계기관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 - 유아교통안전교육 홍보 동영상 및 방문 교육 -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 - 유치원급식 식중독 합동점검, 소규모유치원 급식점검, 교육지원 - 방역인력지원 • 돌봄 사업 - 사립유치원 저녁 돌봄교실 운영지원 지방보조금 신청 안내 협조 - 온종일돌봄유치원 운영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방과후 놀이쉼터 - 지역 돌봄체제 협력 구축 및 운영 •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소규모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장학 활동, 동행장학 - 유치원 평가 및 원아모집, 방과후 운영 등 • 유치원 평가 • 공립유치원 신·증설 • 처음학교로(유아모집) •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지원 • 취학 원아 파악 자료 제공 • 냉난방기 지원사업 • 유치원 교복, 체육복지원 • 교원 인사 운영,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체육강사 활용 • 연수 및 워크숍 진행 시 지원, 행사 시 지역행정기관 지원 - 체험센터 생태교육, 시설 관련 지원 • 유아교육체험센터 개방 • 작은학교네트워크 • 미래교육협력지구(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사업 • 시니어 지원사업(유치원 교육활동 지원) • 전통문화 체험, 유아 한마당 축제,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사업 • 생존수영 점검

□ 업무별 연계 협력 필요성 수준(5점 척도)

- 대체로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음.
- 특히 돌봄서비스 연계(4.6점), 원아 건강·안전 지원(4.33점), 예산 협력(4.15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3.93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비교적 낮은 협력 필요성을 띄는 업무로는 교원 연수(3.04점),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2.91점).

□ 현재 시점에서 교육청에서 인식하는 시도청/시군구청과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돌봄서비스 연계임.

- 시교육청(65.8%)보다는 도교육청(78.8%)이, 본청(62.5%)보다는 교육지원청(77.9%)이, 수도권과 경북권(66.7%)보다는 타 시도에서 돌봄서비스 연계 여부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함.

□ 돌봄서비스 이외에 우선적인 협력 업무로 예산 협력, 원아 건강·안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부모·보호자 교육 등의 순으로 응답됨.

- 타 업무에 비해 교원 연수는 연계 협력 우선순위 하위권임.

〈표 5〉 시도청/시군구청과 연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인식

단위: 점

구분	돌봄서비스 연계	원아 건강, 안전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원 연수	부모,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아, 교원, 부모용)	지침 및 매뉴얼 개발	유치원	예산 협력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4.60 (0.82)	4.33 (0.94)	3.70 (1.22)	2.91 (1.35)	3.93 (1.12)	3.04 (1.32)	3.70 (1.22)	3.46 (1.28)	3.43 (1.34)	3.63 (1.23)	4.15 (1.11)
시/도											
시	4.53 (0.86)	4.47 (0.84)	3.49 (1.24)	2.61 (1.28)	3.86 (1.09)	2.91 (1.30)	3.43 (1.26)	3.18 (1.32)	3.41 (1.30)	3.54 (1.25)	4.09 (1.13)
도	4.66 (0.78)	4.22 (1.01)	3.86 (1.18)	3.15 (1.37)	3.98 (1.14)	3.15 (1.33)	3.91 (1.15)	3.68 (1.22)	3.45 (1.38)	3.70 (1.22)	4.20 (1.09)
t	-1.01	1.77	-2.01*	-2.72**	-0.70	-1.21	-2.64**	-2.62**	-0.24	-0.82	-0.68
권역											
수도권	4.57 (0.70)	4.40 (0.89)	3.64 (1.27)	2.73 (1.32)	3.88 (1.11)	3.01 (1.36)	3.56 (1.28)	3.43 (1.31)	3.53 (1.36)	3.63 (1.21)	4.27 (0.95)
충청권	4.68 (0.94)	4.39 (0.99)	4.14 (0.97)	3.29 (1.51)	4.18 (1.02)	3.46 (1.29)	3.64 (1.31)	3.82 (1.25)	3.57 (1.23)	3.86 (1.27)	4.39 (0.83)
전라권	4.43 (0.90)	4.09 (0.90)	3.65 (1.19)	2.96 (1.22)	3.61 (1.31)	3.04 (1.22)	3.78 (1.09)	3.35 (1.23)	3.26 (1.32)	3.48 (1.08)	3.91 (1.24)
경북권	4.78 (0.55)	4.44 (0.78)	3.61 (1.29)	2.89 (1.49)	3.89 (1.02)	2.67 (1.53)	4.11 (1.18)	3.22 (1.44)	2.83 (1.54)	3.67 (1.46)	4.00 (1.33)
경남권	4.54 (1.14)	4.27 (1.15)	3.42 (1.27)	2.85 (1.29)	4.08 (1.16)	2.96 (1.22)	3.54 (1.14)	3.38 (1.24)	3.58 (1.24)	3.58 (1.30)	3.88 (1.42)
강원/제주	4.88 (0.35)	4.13 (1.13)	3.88 (1.13)	3.38 (1.30)	4.00 (1.07)	3.00 (1.07)	4.50 (0.76)	3.50 (1.31)	3.38 (1.41)	3.38 (1.30)	4.13 (1.25)
F	0.63	0.56	1.11	0.90	0.78	0.89	1.44	0.62	1.00	0.33	1.01
기관 유형											
본청	4.48 (1.01)	4.23 (1.08)	3.52 (1.31)	2.88 (1.42)	3.89 (1.15)	2.84 (1.28)	3.34 (1.25)	3.13 (1.31)	3.16 (1.28)	3.38 (1.26)	4.11 (1.15)
교육지원청	4.66 (0.71)	4.38 (0.88)	3.78 (1.17)	2.93 (1.32)	3.94 (1.11)	3.14 (1.33)	3.86 (1.17)	3.61 (1.25)	3.56 (1.35)	3.75 (1.21)	4.17 (1.09)
t	-1.16	-0.95	-1.33	-0.23	-0.27	-1.41	-2.69**	-2.35*	-1.85	-1.88	-0.36
직군											
전문직	4.70 (0.70)	4.47 (0.84)	3.68 (1.26)	2.93 (1.41)	3.87 (1.17)	3.15 (1.35)	3.83 (1.21)	3.52 (1.30)	3.50 (1.37)	3.72 (1.23)	4.24 (1.10)
행정직	4.30 (1.06)	3.88 (1.12)	3.74 (1.09)	2.86 (1.17)	4.09 (0.95)	2.72 (1.18)	3.28 (1.16)	3.26 (1.24)	3.23 (1.23)	3.35 (1.21)	3.88 (1.10)
t	2.28*	3.19**	-0.29	0.30	-1.24	1.86	2.62**	1.17	1.13	1.72	1.83
경력											
1년 미만	4.78 (0.54)	4.67 (0.59)	3.86 (1.25)	3.08 (1.38)	3.92 (1.23)	3.22 (1.51)	4.11 (1.01)	3.75 (1.30)	3.86 (1.40)	3.83 (1.23)	4.58 (0.69)
1~3년 미만	4.58 (0.82)	4.36 (0.88)	3.57 (1.15)	2.75 (1.39)	3.81 (0.96)	2.91 (1.29)	3.66 (1.29)	3.38 (1.29)	3.26 (1.35)	3.57 (1.18)	3.96 (1.29)
3~5년 미만	4.69 (0.65)	4.37 (0.88)	3.88 (1.13)	3.06 (1.34)	4.06 (1.07)	3.22 (1.25)	3.84 (1.12)	3.61 (1.17)	3.65 (1.20)	3.82 (1.15)	4.22 (0.92)
5~10년 미만	4.46 (0.81)	4.00 (1.02)	3.77 (1.18)	2.88 (1.18)	4.08 (1.13)	3.12 (1.14)	3.46 (1.17)	3.35 (1.26)	3.35 (1.20)	3.46 (1.17)	3.92 (1.29)
10년 이상	4.14 (1.56)	3.86 (1.56)	3.00 (1.57)	2.57 (1.50)	3.64 (1.55)	2.36 (1.34)	2.71 (1.38)	2.64 (1.45)	2.36 (1.34)	3.00 (1.66)	3.93 (1.27)
F	1.90	2.98*	1.79	0.70	0.65	1.53	3.97**	2.21	4.00**	1.61	2.29

* $p < .05$, ** $p < .01$

주: 1점(연계협력 필요성 낮음)~5점(연계협력 필요성 높음) 척도를 사용함

〈표 6〉 시도청/시군구청과 연계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인식(1순위)

단위: %(명)

구분	돌봄서비스 연계	원아 건강, 안전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원 연수	부모, 보호자 교육 부모용	프로그램 개발 (원아, 교원, 매뉴얼 개발)	유치원	예산 협력	계(수)
전체(1순위)	73.0	3.4	1.1	1.1	6.2	-	1.7	0.6	0.6	10.7	100.0 (178)
시/도											
시	65.8	5.1	1.3	1.3	11.4	-	1.3	0.0	0.0	12.7	100.0 (79)
도	78.8	2.0	1.0	1.0	2.0	-	2.0	1.0	1.0	9.1	100.0 (99)
$\chi^2(df)$						10.93(9)					
권역											
수도권	66.7	6.7	1.3	0.0	9.3	-	2.7	0.0	0.0	12.0	100.0 (75)
충청권	78.6	0.0	0.0	0.0	0.0	-	0.0	0.0	0.0	17.9	100.0 (28)
전라권	78.3	0.0	4.3	0.0	0.0	-	0.0	4.3	0.0	8.7	100.0 (23)
경북권	66.7	0.0	0.0	11.1	5.6	-	0.0	0.0	0.0	16.7	100.0 (18)
경남권	80.8	3.8	0.0	0.0	11.5	-	3.8	0.0	0.0	0.0	100.0 (26)
강원/제주	87.5	0.0	0.0	0.0	0.0	-	0.0	0.0	12.5	0.0	100.0 (8)
$\chi^2(df)$						71.82(45)**					
기관 유형											
본청	62.5	0.0	0.0	3.6	7.1	-	0.0	1.8	0.0	21.4	100.0 (56)
교육지원청	77.9	4.9	1.6	0.0	5.7	-	2.5	0.0	0.8	5.7	100.0 (122)
$\chi^2(df)$						23.99(9)**					
직군											
전문직	80.7	3.7	0.7	1.5	2.2	-	0.7	0.0	0.0	9.6	100.0 (135)
행정직	48.8	2.3	2.3	0.0	18.6	-	4.7	2.3	2.3	14.0	100.0 (43)
$\chi^2(df)$						33.03(9)***					
경력											
1년 미만	77.8	2.8	2.8	0.0	5.6	-	2.8	0.0	2.8	5.6	100.0 (36)
1~3년 미만	73.6	5.7	0.0	0.0	7.5	-	1.9	0.0	0.0	9.4	100.0 (53)
3~5년 미만	73.5	4.1	2.0	4.1	4.1	-	0.0	2.0	0.0	10.2	100.0 (49)
5~10년 미만	73.1	0.0	0.0	0.0	3.8	-	0.0	0.0	0.0	19.2	100.0 (26)
10년 이상	57.1	0.0	0.0	0.0	14.3	-	7.1	0.0	0.0	14.3	100.0 (14)
$\chi^2(df)$						30.83(36)					
2순위	9.3	24.4	5.2	1.2	11.0	0.6	12.8	2.3	1.7	26.2	100.0 (172)
1+2순위	82.0	27.0	6.2	2.2	16.9	0.6	14.0	2.8	2.2	36.0	100.0 (178)

** $p < .01$, *** $p < .001$

4.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연계협력 방안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보육 사무와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아교육 사무 간에 연계와 협력이 매우 느슨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시도청과 교육청간의 연계협력 우선순위 업무 파악

- 예)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 모색

시도청/시군구청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시도청과 교육청간의 연계협력 우선순위 업무 추진시 업무 분장 및 역할 담당

☐ 유보통합 대비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에서 연계와 협력 강화

☐ 일반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직급을 맞추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급 상향 필요(교육장은 3~4급 정도)

- 교육장의 직급은 교육부의 소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 필요

**주제
발표**

유보통합 대비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김 용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유보통합 대비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김 용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 유보통합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이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책 지지 역시 상당하다. 그런데,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지지를 받아왔으나,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절한 역사가 있다. 모쪼록 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협력은 말만큼 쉽지 않다. 부처 간의 협력은 조직 이기주의에 가로막히기 일쑤이다. 조직 이기주의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직 간 협력은 쉽지 않다.
 - ‘부서 간 협력을 가로막는 네 가지 장벽’은 협력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않거나, 공감하는 경우에도 협력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 협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네 가지 장벽은 다음과 같다.
 - 첫째, NIH(Not Invented Here) 장벽이다. 이것은 타 부문으로부터 정보,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 둘째, 독점(Hoarding) 장벽이다.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지식을 타 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데에서 비롯된다.
 - 셋째, 검색(searching) 장벽이다. 이것은 필요한 정보나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 마지막으로, 이전(Transfer) 장벽이다. 이것은 자기 부문에서 타 부문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제대로 옮겨주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사이에 앞의 네 가지 현상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현 시점에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간의 유보통합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보통합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다.
 - 교사 자질이 법정되어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가 이전 수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 결정이 우선적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이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한 일을 수행하면서 협력적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일은 중요하다. 만약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결정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협업 능력과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통합 작업이 순조로울 수 없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관계자들이 협업 능력과 태도를 갖춘 상태에서 중앙정부 수준의 통합 방침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책 집행을 매우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문제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확대 가동**한다.
 - 유보통합의 집행은 종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기초 단위 수준에서 모든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또, 시·군·구 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주민의 불만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 현행 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시도시자와 교육감을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양 주체의 합의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장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유보통합에 관한 사무 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시도청의 보육 관련 공무원과 교육청의 유아교육 관련 공무원으로 실무 추진단(또는 지원단)을 구성한다.
 - (가칭) **유보통합 시민 지원단을 구성**한다.
 - 예컨대, 시도청과 교육청이 추천하는 동수의 시민, 또는 공모 방식을 활용하여 일정 수의 시민으로 지원단을 구성한다. 시도청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협의하면서 통합 작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직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협력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 시민들이 일종의 배심원으로 통합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민 지원단은 일종의 사회적 협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양 기관의 의견이 대립할 때 시민 입장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시민 지원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동시에 구성할 수도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만 구성할 수도 있다.
 - **유보통합 작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대강을 결정한 후에는 어차피 시도청과 교육청이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에 앞서 먼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양 기관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양 기관이 균등하게 정보를 공유한다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중앙정부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협력적 실천을 도모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 현재 많은 주민들의 정책 수요가 높은 아동 돌봄에 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사이의 협력적 실천을 과제로 제안한다.
 - 몇 가지 법적 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시군구와 교육지원청이 (가칭) 아동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아동 돌봄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협력하여 실천하는 경험은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 양 기관 사이에 소속 직원 약간명을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미 지역에 따라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을 교차 근무하도록 하거나, 한 기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상대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인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 자주 만나는 것이 협력의 첫 걸음이다. 자주 만나고 함께 하는 일이 많아지면 협력은 수월해진다.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